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서 찬성 9표로... 국회, 표결 직전 퇴장 야권, 법사위 논의 지연시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 방침 정의당, 상임위 통과에 환영... "겨우 8부 능선 넘었을 뿐"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다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9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진행했다.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18명 중에 민주당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국회의원은 표결 직전 단체로 반발하다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 입자자 간사는 의결 전 "민주당은 공부 진짜 많이 해야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까지 파탄내려고 한다. 민주당총의 청부 압박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날치기"라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민의힘의 반발에 구성된 안전조정위원

회에서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법제 사법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자.

야당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한편, 정의당은 21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와 함께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 본회의 통과와 법 시행까지 지속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환노위 소속인 이은주 의원은 회의 후 국회 분청 앞 정의당 농성장으로 다가오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왔다고 보고했고, 농성장에 대기 중이던 정의당 관계자들은 서로 악수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누며 격려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대표는 "오늘로부터 85일 전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일하면서도 노동자일 수 없었던 플랫폼 노동자들, 진짜 사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하청 노동자들, 아무리 부당 노동행위를 당해도 손해배상 때문에 입 한 번 뿔뿔할 수 없었던 이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85일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인 연원이 노동자를 돈으로 짓누르는 이 세상을 바꿔 보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원이 노란봉투법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벌기업과 정부는 노란봉투법 불법과업으로 산업평화를 해친다고 우기지만, 대와 가능해야 평화도 있는 법"이라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노란봉투법은 겨우 8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소수 재벌들과 경총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권은 노란봉투법이 위협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법원 판결, 국가인권위 권고, 국제사회까지 제안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삼권분립을 어겨가면서 정면 부정하고 있다. 정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짓누르려 한다면 국회는 모든 권한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평등하게 책 읽을 기회'

민주 김윤덕 의원,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21일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소외인에 대해 독서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독서 문화에 있어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법안은 '독서동아리'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이 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서뿐 아니라 장애, 지역, 경제적 등의 이유로 음악, 영상 미술, 체육 등의 문화 분야 전반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등을 검토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4·5 전주를 재선거

"시민 선택권 보장... 공개토론회 열자"

김호서 예비후보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호서 예비후보(무소속)가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책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호서 예비후보는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치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주 시민들은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정치 상대 후보들의 공약과 정치적 견해를 모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깜깜이 선거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토론회를 통해 적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한 각 예비후보들이 각자의 성과와 입장, 장점을 혼자서만 주장하고 외치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시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



태"라며 "정책, 도덕성, 수행능력 등에 대해 종합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은 각 후보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 이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려드릴 수 있는 토론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전주의 위기를 극복할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개토론회가 이뤄진다면 시민들은 후보자의 정책 및 도덕성, 의정활동 능력 등을 현장에서 또는 방송을 통해 접하게 돼 후보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서 예비후보는 또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조건 없는 토론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1

"전주 외곽 도시첨단산단 조성할 것"

임정엽 예비후보

임정엽 전주시을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전주 외곽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 기업체 300개 유치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통합 대비 청장년 1만개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전북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며 "도시첨단산단 3곳을 조성해 기업체 300개를 유치함으로써 청년 인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300개 기업체에서 1곳 당 30여명씩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도 1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며 "좋은 일자리야말로 우리지역 청년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첨단산단은 IT, BI와 같은 고부가가치와 첨단 지식정보형 업종이 주력으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축산업으로 꼽을 바이오기술, 기



능성소재, ICT융복합 AR, VR, 메타버스 관련 연구개발 등 고급 인력 유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도시첨단산단 조성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 서 우선 2개 더 늘리는 방식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주·완주 인접지역 2곳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 1곳에 기업체 150개씩 입주하도록 설계하면 2곳에 총 300개의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예비후보는 정부 데이터 등 자료를 근거로 "전북의 산업단지 수는 90개로 같은 도 권역인 경남(206개), 경북(152개), 충남(166개), 충북(131개), 전남(105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특히 첨단산단의 경우 강원도 춘천시에만 4개가 있는 반면 전북은 소규모 1개뿐이면서 능력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 지역이 바뀌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뉴스1



2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과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열렸다.

"도농간 이동권 격차 해소, 인구소멸위험지역 되살려야"

민주 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 법률 제정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1일 오후 2시,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가 취재진과 보좌진, 정부 관계자와 협력관, 정읍·고창에서 성원하러 방문한 주민 등이 참여했다.

윤준병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교통수요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온 것에 반해, 투자가 빈곤했던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라며 "지방 교통체계의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는 당연히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체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 그는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



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등 취약계층의 내용을 담은 이 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위성곤·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축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정진형 교수는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지방소도시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모빌리티 시대에서 지방 소도시에서의 교통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진단해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 팀장은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 "농어촌 등 지방 시·군의 고령화 심화, 저출산, 도시로 인구 유출 등 인구과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은 지방 재정력 약화, 공공인프라 투자나 유지 관리 재원 부족, 산업기반 약화, 교통수요 감소 현상이 야기되고 버스 운송사업 여건 약화는 버스 운행축소나 노선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김대환 기자

이어 임 연구원은 "정부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경제·사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버 오지를 운영하는 버스노선(벽지노선), 100원 택시, 1,000버스로 불리는 도시형·농촌형 교통 모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소멸위기 지방도시 지역주민이 이동권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소외지역 지원사업의 계획·실행·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 생활권 범위와 이동 패턴, 교통수요에 대응해 버스와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의 연계성 확보, 장거리·골목 노선의 운영 합리화 등 교통소외지역 공공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공익서비스비용보상(PSO) 제도의 현황과 한계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하며 "공익서비스비용보상제도는 국민전체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배제되고 있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어촌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후 강강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배종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수석연구위원 등 패널이 지정토론회를 벌였다. /정승·김대환 기자

군산시의회, 시민과 협업 기업이전 이끌어 내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14일 OO 군산공장을 방문하여 기업에 로사행을 청취하고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등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에 나선 가운데, 최근 지역발전이전 전주매일 김판곤 이사 등 시민과의 협업으로 기업 이전을 이루어 내어 투자 유치의 성과를 거두었다.

유치한 기업은 골삭기 및 농기계 버켓을 중점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강진산업으로 4천여 평의 공장 규모에 벤처기업 인증 및 뿌리기업 등록을 받았고 기술역량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다.

강진산업은 시의회와 김판곤 이사의 수차례 면담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산에 50억원 투자규모로 올해 안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제9대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코로나 팬데믹 및 에너지 다변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민하고, 시민 및 기업들과 다각도로 소통하는 가운데 이루어 낸 성과로 향후 지역의 살길을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 의장은 "의회는 앞으로 단지 견제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겠다는 다짐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며 "군산새만금항 관련 등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기업유치라는 발판에 섰봉장이라는 각오로 강소기업, 미래산업 육성방안을 구상하고 하나하나 결과물을 창출해 군산경제를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이재훈 기자